

2026년 5월 29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반도체 호황 속 달라진 성장과 금리 환경

한국은행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는 한편, 수정 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은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하며 지난 2월 전망치(2.0%) 대비 0.6%p 높였고, 2027년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종전보다 0.3%p 상향 조정하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정부 정책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한 IT 수출 호조세가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시장 컨센서스도 점차 2%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경기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I 투자 사이클 속에서 인프라 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핵심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국내 성장 동력이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황이 양호할 경우 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해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경기 수요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 계획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프라 수혜 산업에 대한 수요 기대는 당분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 등락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수록 산업별·계층별 수혜 여부에 따라 성장의 차별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K 자형 성장 패턴 역시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완충 역할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당국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금리 인상 카드 역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 유동성 증가세, 최근 임금 인상 움직임 등은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2%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물가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K 자형 성장 패턴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원은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확대 등은 시장금리의 상방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